



주간통일정세 2011-31(2011.07.25 ~ 07.3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3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정은, 해군사령부 시찰(7/2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해군사령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해군사령부 방문을 보도하기는 2002년 5월 2일 이후 9년 만이다. 그해 6월29일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고속정을 공격하는 제2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바 있어 이번 시찰이 주목
 - 이날 시찰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당 중앙군사위 위원인 김경옥·김명국·김원홍,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등이 수행

- **北리종산 차수 사망…김정일 애도화환 보내(7/25,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리종산 조선 인민군 차수(큰 별 하나·대장 바로 위 계급)가 사망한 것으로 25일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4일 리 차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
 - 일반 군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은 '원수'(목란 없는' 큰별 하나)로 김일성 주석한테만 부여된 '대원수'(목란+큰별 하나)와 김 위원장에게 붙여진 '공화국 원수'(목란 반+큰별 하나) 타이틀이 따로 있음.

- **北 이번 지방선거서도 '100% 찬성표'(7/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24일 실시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투표 참가자들이 후보자에게 100% 찬성표를 던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중앙통신은 이날 중앙선거지도위원회의 대의원 선거결과를 종합해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해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 찬성 투표했다"고 전함.
 - 북한의 선거는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단독후보에게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찬성이면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반대를 표시하려면 연필을 집어 들어 후보자의 이름에 횡선을 그어야 하는데 투표자의 뒤편에서 북한 당국자가 지켜봐 반대표를 던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짐.



● **北,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채택(7/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내각의 결정으로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중앙통신은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은 공화국의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집행해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 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전함.
- 시행규정은 4개장, 60개조로 구성됐고 환경보호사업, 환경오염 예방, 자연환경 보존 등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음.

● **北 박의춘 외상, 말聯 부총리 예방(7/26, 더스타)**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부총리를 예방했다고 말레이시아 일간 '더 스타' 인터넷판이 26일 보도
- 신문은 말레이시아를 처음 방문한 박 외상이 전날 3일 일정으로 입국, 장용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함께 부총리를 만났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박 외상이 이번 방문기간에 부킷 잘랄에 있는 말레이시아 테크노파크를 방문하고 경제계획위원회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 **북미회담 앞두고 北 '평화협정 체결' 강조(7/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6·25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미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강조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정전협정과 조선반도'란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 사이의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를 포함한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밝힘.
- 논평은 "정전협정 당사국인 조선과 미국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한 호상 불신을 가실 수 없고 비핵화도 순조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자회담 과정이 보여준 교훈"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은 신뢰조성의 시작으로서 조미 쌍방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 존중과 평등의 관계를 마련하는 제도적 담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

● **北 "미사일방어망, 새로운 핵무기 경쟁 촉발"(7/28, 연합뉴스)**

- 북한이 북미 회담을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각)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유엔의 핵무기 해체 토론회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 "절대적 핵 우위를 얻고 다른 핵 경쟁국에 대한 전 세계적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신 대사는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망은 미국이 핵확산에 관해 다른 국가에 뭐라고 말할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28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 북미 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할 얘기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

● **김정일 '전승절' 경축 공연관람·연회참석(7/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전승절(휴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열린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을 관람하고 경축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공연관람에는 최영립 내각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부장, 최룡해·박도춘 당비서,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양건·태종수·김평해 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함께 했으며, 또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명수인민보안부장, 김경옥·김명국·김원홍·김영철·윤정린 당 중앙군사위원, 정명도 해군사령관, 리병철 공군사령관,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도 참석
-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에서 마련한 전승절경축연회에도 참석

● **김정일·정은, 5·11 전자공장 현지지도(7/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액정TV 등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5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공장을 돌아보고 현대화·CNC(컴퓨터수치제어)화된 생산공정에서 조립된 전자제품들을 보면서 공장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이들의 창조정신을 치하했다고 방송은 전함.



■ 기타 (대내 정치)

- 박의춘 외무상, 7.22 인도네시아·라오스 외무상 및 아세안 총서기와
 촉촉 담화(7/25, 중통)
- 김영일, 7.25 영국 레이버당 전국정책연단 성원들과 만나 담화(7/25,
 중통·중방)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에 의해 駐불가리아 대사에 '주왕환'
 임명(7/25, 중통·평방)
- 박의춘 외무상 일행, 7.25 말레이시아 부수상 겸 전력상과 담화
 (7/26, 평방)
- 박의춘 외무상과 일행, 7.26 말레이시아 외무상과 회담(7/28, 중통·
 평방)
- 박의춘 외무상, 7.27 싱가포르 외무상과 회담(7/28, 중통)
- 최영림 총리, 7.26~27 평양민속공원·태권도성지건설장·평양시 8월3
 일인민소비품전시회장 현지 오해(7/28, 중통)
- 김영남, 7.28 移任 駐北 쿠바대사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7/28, 중
 통·중방)

나. 경제

● 中 을 상반기 두만강유역 대북 교역 급증(7/26, 연변인터넷방송)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회령과 맞닿은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용
 정(龍井)시 삼합(三合)통상구의 올해 상반기 대북 교역량이 5만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증가했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6일 보도
- 용정시는 대북 교역 활성화를 위해 통관 수속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북
 한도 수출·입 화물의 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철광석 등 지하자
 원 수출 물량과 쌀과 밀가루 등 중국산 곡물의 수입 쿼터를 늘리는 등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적극적이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식량난, 수년 만에 최악"(7/26, AP통신)

- 북한이 집중호우와 지난해 겨울 한파로 인해 수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AP 통신이 평양 순안발로 26일 보도
- 통신은 평양에는 먹거리를 파는 노점상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햄버거와
 피자 가게도 북적이는 등 식량이 풍족해 보이지만 수도에서 멀리 떨어
 진 지역은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현지 주재 외국 구호단체를 인용
 해 전함.
- 북한은 과거 약 10년간 남한의 지원과 경제협력으로 식량 부족분을 메
 울 수 있었지만, 지난해 천안함이 '어뢰 공격'을 받은 후 이명박 대통령
 이 거의 모든 대북 협력사업을 중단시켰으며, 월평균 남북 교역량도 지
 난해 상반기 미화 4천만 달러에서 올해 들어 100만 달러 규모로 위축
 됐다고 통신은 설명
- 식량 사정이 나빠진 이유로는 불리한 지형과 기후 조건, 토양 산성화,



비료 부족 등과 함께 최근 구제역으로 농사에 쓸 소가 부족해진 점 등이 꼽힘.

● **中, 北 석영 채굴권 확보..연 5만t규모(7/27, 길림신문)**

- 중국이 북한의 석영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고 길림신문이 26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장백(長白)현에 있는 장백경제개발구 변경무역 수출입총회사가 북한의 조선신진회사와 공동으로 량강도 김정숙군에 있는 석영 광산을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이 광산에서 채굴된 석영을 처음으로 중국에 들여옴.
- 이 회사는 북한 측과 오랜 협의 끝에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으며 연간 4만-5만t의 석영을 채굴해 중국에 들여올 계획

● **"국제적십자, 황해도 수해지원 시작"(7/27,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국제기구에 수해 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황해도 지역에 구호물품을 분배하기 시작했다고 27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프랜시스 마커스 IFRC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자료를 통해 "조선적십자회가 개성시를 포함한 황해북도 수재민들에게 주방용품, 식수통, 이불, 방수비닐막 등이 포함된 응급 구호세트 600개를 분배했다"며 "앞으로 황해남도에서 2천460세트를 더 분배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제NGO '모니터링 방북' 줄 잇는다(7/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기구와 유럽연합(EU)이 엄격한 분배 확인을 조건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국제 민간단체(NGO)들이 지원물자 분배 확인을 목적으로 잇따라 방북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독일의 구호단체인 캡 아나무르(Cap Anamur)의 번트 고켄 대표는 평안남도 안주 등에 지원한 쌀과 콩의 분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주말 방북해 내달 3일에 돌아올 예정
- 또 북한 내 29개 결핵병원과 요양원에 의약품과 식량 등을 지원하는 미국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8월 초에 닭고기 통조림과 영양보조제, 담요 등을 실어 북한으로 보낼 예정
- 방송은 또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해 콩우유를 지원하는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도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북한을 방문, 19일 120t의 콩이 북한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전함.

● **"北, 캄보디아 쌀 수입 희망"(7/27, 연합뉴스)**

- 리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은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해 가능한 한 조기에 쌀 수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우치 보리트 캄보디아 외무차관이 2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대신 캄보디아에 광산 개발 및 수력발전 댐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서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제안

- **"상반기 北中교역 사상최대...작년의 2배"(7/29, 미국의소리(VOA))**
 - 올해 상반기 북중 간 교역액이 25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전함.
 -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통계자료를 종합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중 간 교역액은 25억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억8천800만 달러의 배에 달함.
 - 특히 북한의 대중수출 규모는 작년 동기(3억5천만 달러)보다 202% 증가한 10억5천6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 수입액은 14억5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54% 증가하는 데 그쳐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5억9천만 달러에서 3억9천200만 달러가량으로 크게 줄었다고 방송은 전함.

- **北-中, 라선 공동개발 계획 기본 틀 합의(7/29, 길림신문)**
 - 북한 라선시와 중국 지린(吉林)성이 29일 라선 경제무역구 공동개발 계획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길림신문이 보도
 - 신문은 양측이 이날 창춘(長春)시 난후(南湖)호텔에서 '중조(中朝) 라선 경제무역구(2011-2020년) 계획 기본 협의'를 맺었다고 전함.
 - 쓴 서기는 이 자리에서 "라선과 황금평·위화도 공동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린성은 이미 라선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했으며 교통망과 자원 개발, 농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소개

- **北 "황해북도 서흥군 농경지 70% 침수"(7/30, 조선신보)**
 - 황해북도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서흥군의 농경지 70%가 침수돼 올해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 평양에서 약 110km 떨어진 서흥군은 비와 강냉이의 생산지로 지난 12~15일 480mm의 강우량을 기록한 데 이어 26~28일에도 302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이 신문은 전함.
 - 서흥군인민위원회의 염정연 사무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자료가 종합되면 피해 상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빗물이 빠진 뒤 흙탕물에 잠긴 농작물을 깨끗이 씻어냈으나 올해 수확량이 예년의 40%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함.

다. 군사

- **北, 서해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준비(7/26, 연합뉴스)**
 - 북한이 서해에서 지상·해상·공중 합동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북한의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와 온천 공군



기지에 함정과 전투기가 집결해 군사훈련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전협정 체결 58주년인 27일 이후에 상륙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또한 북한군은 서해 남포 갑문 주변에 상륙함정과 공기부양정, 전투함 등 20여척을 대기시키고, 강원도 원산기지에 있는 미그-21 전투기를 온천 비행장으로 전개해 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소식통은 "북한군이 하계훈련을 하고 있지만 정전협정 체결일에 즈음해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우리 군이 지난달 서북 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한 것에 대한 대응훈련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군, 호우로 훈련규모 축소..병력 장비 철수(7/29, 연합뉴스)

-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훈련을 준비했으나 집중 호우로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9일 "북한이 남포 해군기지와 온천 공군기지에 함정과 전투기를 집결시켜 지상·해상·공중 합동훈련을 실시할 징후가 포착됐으나 정작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면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훈련에 참가한 병력과 장비를 철수했다"고 밝힘.
-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정전협정 체결일(7.27)에 즈음해 합동훈련을 하려 했으나 기상조건이 맞지 않았고 집중 호우 때문에 많은 부대가 침수되는 피해에 따라 훈련 규모와 일정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함.

■ 기타 (대내 군사)

- 北군사대표단-라오스인민군 총참모부 대표단, 7.28 평양에서 회담 (7/28, 중통·평방)

라. 사회·문화

● 北 "댐·갑문으로 대동강 홍수 막아"(7/2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동강 유역에서는 이달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
- 중앙방송은 이날 보도에서 "기상수문군 일군들에 의하면 7월 중순 우리나라 중부지대에 여러 날 머무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무더기비(집중호우)가 내렸다"며 "그러나 당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대동강 유역에 솟아난 발전소 언제(댐)들과 서해갑문을 비롯한 계단식갑문 들이 이번 큰 물(홍수)을 손쉽게 막아냈다"고 주장

● 유엔 수해조사단 "황해도 수인성 전염병 급증"(7/29, 자유아시아방송(RFA))

-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황해남도 해주시



와 청단군, 황해북도 서흥군 등 수해지역에서 피해를 조사한 유엔 합동 대책단은 "항남 청단과 해주에서 설사병에 걸린 어린이 환자가 각각 20%이상, 40% 증가했고 말라리아와 피부병 감염도 늘었다"고 밝힌.

● **北신문, 강성대국 건설에서 여성역할 강조(7/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은 30일 '남녀평등권 법령' 발표 65주년을 맞아 '강성대국' 건설 과정에서의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
- 노동신문은 이날 '여성들은 오늘을 아름답게 추억하는 대고조 시대의 선구자가 되자'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체 여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두리(주위)에 일심단결 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 여성의 불굴의 기상을 힘 있게 펼쳐나가자"고 촉구
- 민주조선도 이날 사설을 통해 "여성들은 강성대국 건설로 들끓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해야 하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며 "천리마 대고조 시기의 기수들처럼 오늘의 강성대국 건설 대전에서 영웅적 위훈과 기적의 창조자가 돼야 한다"고 논평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日, 지난주 中 창춘서 접촉"(7/25, 교도통신)**

- 나카이 히로시(中井浩) 일본 전 납치문제담당상이 지난주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났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복수의 북·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지만, 나카이 전 담당상은 이를 부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교도통신은 나카이 전 담당상이 지난 21, 22일 중국 창춘(長春) 시내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송일호(宋日昊)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와 회담했다며, 나카이 전 담당상의 중국행에는 일본 내각부 납치문제대책본부 직원도 동석했다고 전함.
- 이 통신은 북일 양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의견 조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1년7개월 만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데 맞춰 북·일 간의 물밑 절충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 **후진타오, 김정일에 '수해 위로' 전문(7/31, 조선중앙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문을 보내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위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후 주석은 지난 29일자 전문에서 "최근 귀국의 일부 지역에서 혹심한 큰물 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나는 중



국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조선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동정과 진심으로 위문을 표시한다"고 말함.

- 중앙통신은 앞서 중국 정부와 홍십자회(적십자사)가 북한에 긴급 구제물자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구제물자 지원이 큰물(홍수) 피해 지역에서 북구사업에 진력하고 있는 인민들을 격려해줄 것"이라고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비핵화회담, 남북관계 복원 아니다"(7/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남북 비핵화회담이 남북관계 복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 신문은 '북남회동→조미대화 재개, 봉쇄된 서울의 대결노선' 제목의 글에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회담을 마치고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남측 단장을 만났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외교당국자들의 회동은 북남관계의 복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남북 간) 회동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외교의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과거 평양, 서울에서 북남 사이에 대화가 진행될 때는 남측에서 통일부가 나섰다"고 말해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강조

● 북미대화 뉴욕서 1년7개월 만에 재개(7/29, 연합뉴스)

- 북한의 핵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대화를 갖고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 북미관계 정상화, 6자회담 재개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미국 대표단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의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약속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반면 북한은 평화협정 논의와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제재 해제 등 기존의 '고유 의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짐.
- 이와 관련, 미국은 UEP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718, 1874호)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펼친 데 비해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며 반대논리를 펼 것으로 알려짐.
- 김 제1부상은 12시5분께 점심을 위해 회담장을 빠져나오다 기자들에게 "분위기가 좋았고 건설적 이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한 반면, 미 국무부는 회담이 끝난 뒤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오늘 대화는 진지하고 업무적(business-like)이었다"고 논평, 회담장 분위기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냄.



- **김계관-보즈워스 오찬으로 북미대화 종료(7/30, 연합뉴스)**
 - 미국 뉴욕에서 팽팽한 기싸움과 함께 1년7개월여 만에 재개된 북미 고위급 대화가 29일(현지시각) 이틀째 회동을 끝으로 일단락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김 제1부상이 회담장을 떠난지 한참 후인 오후 2시 30분께 미국대표부 앞에 대기중인 취재진 앞으로 나와 "이번 대화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사전조치에 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함.
 - 이어 그는 김 제1부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을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핵무기 폐기에 관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길은 열려 있다. (후속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덧붙임.
 - 전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던 양국은 이날 비핵화 사전조치와 북미관계 정상화, 6자회담 재개방안 등 핵심 의제에 대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특히 오랜 '밀고 당기기' 끝에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직접대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짐.

- **위성락 "北, 핵-지원 맞바꾸기에 냉담"(7/30, 월스트리트저널(WSJ))**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이 지난주 공식 회동했을 때 북측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지원과 다른 유인책 등을 받는 방안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했다고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전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위 본부장이 지난 29일 서울에서 일부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면서 남북은 차기 주요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30일 보도
 - 6자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위 본부장은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인도네시아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만나 2시간가량 회담했는데, 위 본부장은 당시 회담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북측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지원과 다른 유인책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북은 대신에 핵포기를 전제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담은 9.19공동성명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었다"고 말함.

3. 대남정세

- **정부, 금강산회담 제의...밀가루 지원 승인(7/25, 연합뉴스)**
 -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29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과 관련, "오늘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당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힘.

- 이어 통일부 관계자는 "통지문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당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라고 썼다"며 "이번 통지문은 앞으로 금강산 문제는 당국 간에 논의해 풀자는 의미가 담겨 있고 지난번 접촉에서 관광재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재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함.

● **北 천안함·연평도에 진정성 보여야**(7/25, 연합뉴스)

- 통일부는 25일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미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이 입장에는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답함.

● **北 "남당국, 금강산 재산정리사업 휘방"**(7/26, 조선중앙통신)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2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조선 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관광을 속히 재개해 기업 및 재산등록 등 남측기업 이권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마련했다"며 "남측은 이에 무성의하게 대하고 자국 기업들의 재산정리 차 금강산으로 가는 것을 일부러 가로막았다"고 말함.
- 대변인은 "남측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29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줘 재산정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했으나 남측은 '특구법 철회' '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입장을 고집, 민간기업들을 제치고 저들이 재산정리 협상과 관광사업 협의를 독차지하려는 기도를 드러내보였다"고 지적

● **北 "남기업 새 금강산관광 동참엔 손실보상"**(7/2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28일 자신들이 만든 새 금강산 관광사업에 현대아산 등 기존의 남측 기업들이 동참할 경우 그동안 관광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의의 조치'라는 기사에서 "우리는 지난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면서 금강산에 부동산을 두고 있는 남측기업들이 새로운 관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며 "만약 그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경우 부동산은 그대로 있게 되며 지난 3년간 입은 경영손실액도 인차(곧) 보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 "금강산 부동산처분 실천적 조치 돌입"(7/29,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은 남측 재산정리 자체 요구 시한인 29일 정오
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통일부와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
여하는 남측 기업에 각각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정부와 기
업들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전함.
- 북한은 또 우리 기업인들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일이며 이 기간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
라"고 요구했으며, 이어 "입회한 기업은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미입회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
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힘.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김외교 "남북관계 급격한 진전 기대 못 해"(7/25)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인도네시아 발리 남북 비핵화회담 개최에 따라 남북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 "발리 회담이 있었다고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을 바로 기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발리 회담은 남북관계에 어떤 물꼬가 좀 트였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미국 방문과 그 이후의 한미 협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차분히 (6자) 회담을 끌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김 장관은 또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면 남북관계도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한다"면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볼 수 있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느냐는 다른 문제"라면서 "6자 회담이 열리면 바로 진전을 이뤄야 한다. 6자회담 전에 핵 활동 중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김계관 제1부상의 미국방문과 관련, "우리와 긴밀 협의해 미국이 비자를 주자고 결정한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남북 간 추가 회담 계획에 대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에)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고, 북측이 뚜렷한 답을 준 것은 아니나 앞으로 그런 문제를 협의 하겠다"면서 "김계관 제1부상의 미국 활동을 보고 한미 간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 한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 아닌 3~4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6자 틀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것은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 美 캠퐰 "北과의 핵협상 서두르고 있지 않다"(7/25)

-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 재개를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25일 밝혔다. 커트 캠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금주 중으로 예정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뉴욕 방문을 이날 거론하면서 이번 북미 접촉은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며 북핵 문제



6자 회담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 그는 "이번 접촉에서 6자 회담 재개뿐 아니라 직접적인 북미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화 진전을 이끌어 내려면 북한이 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그는 김 제1부상의 뉴욕 방문이 북미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패스트 트랙(신속 절차)' 과정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 "中, 美의 '실질적 진전' 희망 北에 알려야"(7/25)

- 중국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원한다는 사실을 북한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중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측근이 25일 밝혔다. 이 측근은 클린턴 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후 24일 홍콩을 찾았다가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회담을 위해 25일 선전(深천<土+川>)에 도착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 그는 "(이번 클린턴·다이빙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진전을 보고 싶다는 미국의 결정을 전달해달라고 중국에 확실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지난 24일 클린턴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번 주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뉴욕으로 초청했다고 밝히고서, 이를 계기로 한 '뉴욕 북미대화가'가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6자회담 재개 흐름 속 '한미 역할분담' 주목>(7/26)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남북 비핵화 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6자 회담 재개 흐름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역할 분담과 공조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북한이 남북대화 후 북미대화를 곧바로 추진, 정부의 3단계 회담 재개방안(남북 비핵화 회담→북미접촉→6자회담 재개) 중 남북·북미 대화가 병행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미 양국이 서로 보조를 맞추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이유에서임.
- 특히 남북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북한이 북미대화에 '올인'하며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빈틈을 없애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발등의 불'이 될 것이란 관측임. 한미 양국은 일단 대응 기조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발리 회담을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의 급진전을 의미하는 '8월 대전환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양국 모두 "급격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단지 과거 상태로 돌아가려고 길게 끄는 회담을 추구할 생각은 없다"(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면서 이런 기대 섞인 전망에 선을 긋고 있음.
- 6자 회담 재개에 목을 매는 것 같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겠다고 양



- 국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임. 이는 6자 회담 재개 전에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선행조치를 관철하겠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의제와 형식으로 보면 한미 양국이 다소 다른 모습임. 일단 북미 대화는 6자 회담에만 초점을 맞춘 남북대화보다 좀 더 포괄적이란 것이 대체적인 관측임. 비핵화 문제 외에 인도적 식량지원 등 북미 간 관계개선과 관련된 근본적인 화두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임.
 - 정부 당국자도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 대화는 비핵화를 주제로 한 남북대화보다 좀 더 이슈를 넓혀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여기에는 미국이 한국과 달리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다는 상황도 반영돼 있음. 국내 정치상황 등에 따라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당사자인 한국은 이 두 문제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 태도 변화 없이 비핵화 논의만 진전시키거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분석임.
 - 이런 이유로 북미 대화의 형식·의미도 남북 대화와 차별성을 띠 것으로 전망됨. 앞서 지난 24일 클린턴 장관이 직접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 일정을 발표, 김 외상의 방문에 힘을 실어준 데 이어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직접 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예비 회의"라고 말했음.
 - 북핵 외교가 일각에서는 한미의 투트랙 접근이 서로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대화의 무게 중심이 북미 대화로 쏠릴 경우 한국이 자칫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설명한 '그랜드 바진'을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기본적 틀로 관철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해 6자 회담 참가국을 상대로 한 외교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음.

● 북미 회담 앞두고 北 '평화협정 체결' 강조(7/27)

- 북한은 6·25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미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정전협정과 조선반도'란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 사이의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 보장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를 포함한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밝혔음.
- 논평은 "정전협정 당사국인 조선과 미국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한 호상 불신을 가질 수 없고 비핵화도 순조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자회담 과정이 보여준 교훈"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은 신뢰조성의 시작으로서 조미 쌍방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 존중과 평등의 관계를 마련하는 제도적 담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문제는 조미 쌍방과 국제사회에 다 같이 이



롭고 세계의 평화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결실 있는 정치적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이 지역의 절박한 정치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서 책임적인 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계관 "6자회담 · 북미관계 낙관"(7/27)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6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 관련) 6자 회담과 북미관계의 전망을 낙관한다"고 밝혔다. 북한 측의 핵협상을 총괄하는 김 부상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 취재 나온 기자들에게 6자회담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북미관계 전망을 묻는 말에 "지금은 모든 나라가 화해를 해야 할 시기이므로 북미관계도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회담 일정을 묻자 "2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할 예정"이라면서 뉴욕에 언제까지 머물지는 회담을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대답했다.
-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에 중국 베이징(北京)을 출발한 김 부상은 이날 당초 예정보다 40분 늦은 오후 3시에 JFK 공항에 도착해 입국수속 등을 마치고 약 50분 뒤 일반탑승객 출구로 나왔다.
- 그가 나오자 취재진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음에도 김 부상은 시종 침착한 모습으로 취재진의 몇 가지 질문에 답변했다.
- 김 부상은 보즈워스 대표와의 핵협상 전망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그때 기뻐서 답하겠다"고 말한 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준비한 검은색 캐딜락 승용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
- 김 부상은 오는 28일과 29일에는 보즈워스 대표와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할 예정이며 다음 달 1일에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 등 민간기관들이 주최하는 한반도 전문가 모임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외교정책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 논의와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도 북 대표단과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북한 대표단 일행은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앞의 밀레니엄 유엔플라자 호텔에 투숙했다.

● 조현동 외교부 북핵단장 급거 뉴욕행(7/28)

- 우리 측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단장은 28일(현지시간)부터 개최되는 북미 고위급 대화와 관련한 사항들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과 북미대화와 관련한 현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조 단장이 이날 오전 급히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의 방미에는 정연두 북핵정책과장을 비롯해 실무직원들이 동행



한 것으로 알려졌음.

- 현재 뉴욕을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8일(현지시간) 부터 이틀간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북미 고위급 대화를 가질 예정임.

● "한미일, 북미대화 후 대응방안 8월초 협의"(7/28)

- 한국·미국·일본은 최근 잇따른 남북대화과 북미대화 후 북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8월 초 협의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이 28일 밝혔음.
- 소식통들은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다음달 회동할 것이라면서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일본은 또 2008년 8월 이후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과 국교정상화 교섭을 다시 가질 용의가 있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며, 28일(현지시간)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 대화 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이들 소식통은 말했다.
- 일본은 이번 3국 협의에서 한국과 미국에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 美 "北, 말보다 행동 필요"(7/29)

- 미국은 28일 뉴욕에서 시작된 북미대화과 관련,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인 조치와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들(북한)이 앞으로 전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신호"라면서 "2005년 공동성명의 약속을 준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말들은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은 우리가 북한에 의사를 전달하고, 그들의 진정성을 알아보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 그는 뉴욕 북미대화가 2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범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한다'는 북한의 전날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뜻을 같이하는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비확산을 가장 우선 순위에 놓고 이를 계속 추구해 가고 있다"고 일축했다.

● IAEA총장, 北 우라늄농축시설에 우려 표명(7/29)

-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이 29일 전했음. 방송에 따르면 아마노 사무총장은 27일 일본 마쓰모토(松本)에서 열린 제23차 군축 관련 유엔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 이란, 시리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음.

- 그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IAEA가 2009년 4월 이후 어떤 핵안전 조치도 이행할 수 없었다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이 농축시설과 경수로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보도에 크게 우려하면서 IAEA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는 전했음.

● <북미대화 일단락..8월의 한반도 '대전환' 모색>(7/30)

- 한반도 정세의 풍향을 가늠해볼 무대였던 북미대화가 29일(현지시각) 막을 내렸음. 1년7개월 만에 공식 대좌한 양측은 이렇다 할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재개의 공감대를 구축하는 선에서 첫 접촉을 매듭지었음.
- 일종의 '탐색전'이 끝난 셈임. 앞으로의 국면은 6자회담 재개로 급진전하기 보다는 각국이 북미대화의 결과를 평가·조율하고 다양한 접촉과정을 통해 6자회담 재개의 조건과 형식에 관한 교집합을 형성해나가는 '예열기간'이 될 것으로 보임.
- 사실 이번 대화의 결과는 예견된 측면이 강했다. 대화국면의 신호탄을 올렸다는 상징성은 있었으나 1년7개월의 공백기를 거쳐 대화테이블에 앉은 북·미 양측으로서는 서로의 '생각'을 확인해보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음. 미국 측이 이번 대화의 성격을 "예비회담"이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도 이런 맥락임.
- 양측이 이번 대화를 평가하며 "건설적이고 실무적 이었다"는 외교적 수사를 쓴 것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것 자체가 후속대화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라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임.
- 주목할 점은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했는지 임. 최대 쟁점인 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놓고는 양측이 참여한 입장차를 드러냈을 가능성이 큼.
- 미국은 UEP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718, 1874호)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프로그램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며 반대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 양측은 이어 서로의 어젠다를 꺼내 대립각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됨. 미국 측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의 임시 중지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북한은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 제재해제 등 '고유 어젠다'를 다시 한 번 제기했을 것으로 관측됨.
- 이번 북미대화 과정에서는 우리 정부도 간접적인 형태로 참여했다고 볼



- 수 있음. 우리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외교통상부 조현동 북핵외교기획 단장이 급파돼 한·미간 긴밀한 조율작업을 가졌다는 후문임.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국을 통해 북측에 전달됐고 이는 북미대화의 내용과 결과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외교가에서는 모처럼 대화의 실마리를 잡은 양측이 단순히 '빈손'으로 북미대화를 끝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음. 후속대화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타협의 여지와 공간을 확보했을 것이라 분석됨.
 - 비핵화 이슈를 놓고는 북한 측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와 같은 상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뜻을 내비쳤을 개연성이 있음. 최소한의 '성의표시'로 대화의 동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대북 식량지원은 '드러나지 않은' 핵심의제로서, 양측이 일정한 접점을 찾았을 것이라 관측이 나옴. 북한은 엄격한 분배모니터링 등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식량지원 전제조건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그에 따라 조만간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북·미간 첫 접촉이 매듭 됨에 따라 앞으로의 정세 흐름은 북미간 후속대화를 중심으로 6자회담 관련국들 간에 다양한 양자·다자접촉이 전개되는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임.
 - 일차적으로는 북미대화 결과에 대한 각국의 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한·미 또는 한·미·일, 한·러, 북·중, 북·러 등 다양한 조합의 외교적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북미간 후속대화의 방향과 북미-남북대화의 병행 여부, 6자회담 재개 시기와 속도 등의 이 같은 교섭의 핵심의제들이 될 것으로 보임.
 - 최대 관전 포인트는 북미 후속대화임. 외교가에서는 우선 '예비회담' 성격의 북미대화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한두 차례에 걸쳐 '본회담' 성격의 후속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스티븐 보즈워스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는 식의 교차방문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음. 북측은 이번 대화에서 보즈워스 대표를 평양에 초청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6자회담으로 가는 중요한 '징검다리'로서의 의미를 갖음.
 - 남북대화의 병행 개최 여부도 중요한 변수임. 앞으로의 국면이 북미대화 쪽으로 과도한 쏠림을 보일 경우 국내적으로 '통미봉남'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은 북미-남북대화의 병행을 이끌어내는 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관련국과의 외교교섭을 통한 '우회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8.15를 계기로 북한에 중대한 메시지를 던지며 태도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음.
 - 주목할 점은 미국 측이 이번 대화에서 북한에게 남북대화를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큰 점임. 북측은 남북대화를 우회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의 '의지'를 확인할 경우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임.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도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앞으로 한미공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음.
 - 향후 정세흐름의 관건은 만남의 '횡수'나 '형식'보다도 '내용'이 될 것 이



- 라는 게 보다 지배적인 분석임. 북한이 일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야 전체 국면이 진전될 수 있다는 얘기임. 정부 고위당국자는 "공이 북한으로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 현 단계에서는 북한 UEP 문제를 중심으로 북미 간에 가파른 전선이 형성되었으나 북한의 성의표시 여하에 따라서는 상황이 급진전될 수 있다는 분석임.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남북과 북미대화를 병행하며 다양한 탐색과 접촉과정을 거칠 경우 9~10월께에는 6자회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일·러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임. 6자회담의 장국인 중국은 남북, 북미대화로 절차적 요건이 해소됐다고 보고 6자회담 조기 재개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음. 다만 북미대화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개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중국과 보조를 맞춰 6자회담 조기 재개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핵화 조치를 주문하는 '중간자'적 입장에 놓여있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향후 정세운용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임. 일본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관심사인 북·일대화 추진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임.
 - 북미대화를 신호탄으로 큰 틀의 대화국면에 진입한 8월의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외교적 교섭활동을 축으로 하는 탐색과정을 거치며 '대전환기'를 예비할 것으로 전망됨.

● 中 신화 "6자회담 재개에 긴 시간 필요"(7/31)

- 미국과 북한 간 1년 7개월 만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아직 '시일을 필요로 한다(需時日)'"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1일 전했다. 통신은 '국제관찰'이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기사에서 이 같은 제목으로 '뉴욕 북미대화'후 전망을 내놨음.
- 통신은 우선 이틀간의 뉴욕 북미대화는 탐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회담 종료 후 양측 수석대표인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음.
- 이어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간 남북비핵화 회담, 27~28일 뉴욕의 북미대화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2단계 절차가 이미 시작됐지만 최종 3단계에 도달하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고 분석했음.
- 특히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북한 핵문제의 복잡성에 비춰볼 때 정말로 6자회담이 재개되기까지는 '시일'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어로 '시일(時日)'은 비교적 긴 기간의 시간을 의미함. 그러면서 "미국이 새 결정을 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분석했음.
- 통신은 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北京) 6자회담을 끝으로 회담이 교착돼온 가운데 미국은 그동안 천안함·연평도 사건, 한반도 비핵화 문제



- 에 북한이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야 북미대화는 물론 6자회담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상기시켰음.
- 통신은 그러고서 회담 종료 후 보즈워스 대표가 미국은 향후 한국을 포함해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어떻게 갈지를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북한 측의 회담 중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 또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는 건설적인 파트너로서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일 경우 대화 재개, 미국과 관계 개선, 큰 틀의 역내 안정을 향한 길이 북한에 열려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 통신은 미국 내에는 이번 뉴욕 북미대화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핵폐기 의지가 천명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등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음.
 -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9년 4월 6자회담 불참 의지를 밝혔으나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아 왔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6자회담 복귀의지를 밝혀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 이어 실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9년 10월 윈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때 "북미 양자회담의 상황을 지켜보고서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그러고서 1년 후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며, 지난 3월에는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하고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6자회담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그간 경위를 소상하게 언급했음.
 - 통신은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 복귀와 동시에 "북미 신뢰관계 수립"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통신은 한국이 비핵화 회담에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분리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써 일단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음. 통신은 그러면서도 한국은 북한에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언제든 6자회담 재개의 장애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당국자 "북미대화, 남북 발리회담 연장선"(7/31)

- 정부 당국자는 31일 "북미대화는 남북 간 발리 대화의 연장선이었다"면서 "총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번 회담의 분위기가 나쁜 것은 아니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이 갈등 해소에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면서도 "오랜만에 만난 북미가 앞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첫발이다"라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앞으로 남북·북미 간 추가 접촉에 대해 "남북대화를 한 북한 리용



호 외무성 부상과 북미대화를 한 김계관 제1부상이 평양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도 내부적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8월 중 한미 고위급 인사간 회동 계기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다음 달 중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의 회동 가능성을 시사했음.

- 그는 미국이 북한에 남북대화를 촉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병행하지는 입장"이라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와 미국 간 공동의제에 대한 입장차는 없다"면서 "미국 태도가 무엇인가 빨리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그는 북미회담에서 천안함·연평도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방문설에 대해서는 "그건 추측으로, 정해진 바 없다", 북일 접촉설에 대해서는 "일본으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 듣고 있는 것은 없다"고 각각 답했음. 그는 북미회담 중 남북간 접촉설도 부인했음.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확정적인 것은 듣지 못했다"면서 "8월 중 지원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음. 그러면서 지난 5월 식량평가팀을 이끌고 방북했던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북미회담에 참석한 것에 대해 "10시간 회담 중 오찬에만 참석했다"면서 "전체 회담에 비해 적은 시간"이라고 지적했음.

● 위성락 "北, 핵포기 전제 지원제안 거부"(7/31)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이 지난주 공식 회동했을 때 북측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전제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남측의 제안을 냉담하게 거절했다고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전했다.
- 위 본부장은 지난 29일 서울에서 일부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북측이 추가회담 일정을 잡자는 남측의 제안도 거부했다고 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음.
- 6자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위 본부장은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인도네시아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장과 만나 2시간가량 회담했음. 위 본부장은 당시 회담에 대해 "북측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 그는 남측은 이 회동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생각했으며 두 번째 단계로는 북측이 이번 주 뉴욕에서 미국 대표와 회담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28~29일 미국 뉴욕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과 북미 고위급 회담을 했음.
- 위 본부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에 대한 평가를 마치는 대로 향후 수주 내로 다음 단계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화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뉴욕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평가했음.
-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한국과 미국은 다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사전 조치(pre-step)'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위 본부장이 외신기자들을 만났을 때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음.
-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이 뉴욕에서 열린 이틀간의 북미대화에서 똑같은 요구로 북한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한편 WP는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에 가장 곤혹스러운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해법이 북한의 핵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합의를 한 뒤 이를 무시하는 과거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임.

나. 미·북 관계

● 北 김계관, 베이징 거쳐 미국행(7/26)

- 북한의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26일 베이징을 거쳐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음. 김 부상을 태운 북한 고려항공 정기편은 이날 평양을 출발해 오전 10시(한국 시각 11시)께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2터미널에 도착했음.
- 김 부상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2터미널 귀빈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정오께 뉴욕 직항편이 있는 제3터미널 출국장으로 들어갔음.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부상 일행에는 리근 미국국장이 포함됐음.
- 김 부상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 뉴욕을 향해 출발하는 중국국제항공 CA981편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음.

● <조선청년이 美여성 구원...北 미국에 구애>(7/26)

-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미국 방문을 앞둔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기사를 내보내 눈길을 끌었음. '조선 청년이 미국여성을 구원하다'란 제목의 이 기사는 북한 청년이 미국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 도중 어디선가 불량배 3명이 나타나 행패를 부리자 북한 청년이 태권도로 불량배들을 쓰러트리며 미국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중앙통신은 이런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것은 조선의 태권도 시범단 성원이 미국땅에서 미국 여성과 함께 펼쳐놓은 시범출연의 한 종목으로 그들의 출연은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고 소개했음.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지난달 9일부터 1주일간 미국 순회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관람한 미국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중앙통신은 소개했음.



- 통신은 이어 "조미(북미)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이해와 존중, 신뢰에 기초한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이라며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는 곡절이나 맺힌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고정불변한 관계는 있을 수 없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인민의 지향과 요구, 대세를 따라 흐르는 역사발전의 기본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또 "미국 인민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은 시범출연이 말해주듯이 조미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관계는 이해와 협력의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두 나라 인민들이 한데 어울리는 데는 아무런 심리적 장애도 없다"고 역설했음.
- 아울러 "조미 사이의 왕래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 마련되는 관계개선의 작고도 큰 동력은 오랜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전략적이고 역사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의 대표적 관영매체가 김계관 제1부상의 방미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임.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북측의 의지가 읽힘.

● 北 "美미사일방어망, 새로운 핵무기 경쟁 촉발"(7/28)

- 북한이 북미 회담을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각)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유엔의 핵무기 해체 토론회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 "절대적 핵 우위를 얻고 다른 핵 경쟁국에 대한 전 세계적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신 대사는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망은 미국이 핵확산에 관해 다른 국가에 뭐라고 말할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28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 북미 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할 얘기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됨.
- 신 대사는 토론회에서 "세계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런 위험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은 어떤 이유이든 국제 사회 앞에서 핵확산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다. 중·북 관계

● <北, 中에 근로자 송출 시도.. 성과는 미미>(7/25)

- 북한이 중국으로 근로자 송출을 적극 시도하고 있으나, 임금 조건 탓에 성사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5일 "당국 차원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근래 북한이 중국에 숙련 근로자를 파견하려 하고 있으나,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인 1천300~1천500위안(21



만2천500~24만5천200원)의 월급을 요구해 중국 기업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도 '소극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 근로자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외국 근로자의 자국 내 유입을 반기지 않고 있음. 중국에서는 기업이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외국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음.
- 북한과 중국은 서로 취업비자를 잘 내주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의 일부 근로자는 연수 또는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서 편법으로 중국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에서는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트인 데 따른 남북경협으로 평양과 개성 등에 의류 숙련공이 많아졌다고 함. 그러나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우리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유휴 숙련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북한의 해당 의류 기업들은 당국의 묵인 아래 유휴 의류 숙련공의 중국 송출을 적극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에 광둥(廣東)성과 허베이(河北)성 등의 일부 중국 의류 사업자들도 북한의 이런 의류 숙련공 채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함. 이와 함께 북·중 접경지역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 두만강 상류의 도문(圖門), 압록강 하류의 단둥(丹東) 등지에서 북한 근로자 고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음.

● 中 지린-훈춘 고속철 2013년 개통(7/25)

- 중국 동북지역 교통 거점인 지린(吉林)성 지린 시와 두만강 유역 대북 교역 창구인 훈춘(琿春)을 잇는 고속철도가 2013년 개통한다고 길림신문이 25일 보도했음. 신문은 지린성이 최근 중국 철도부와 지린-돈화(敦化)-연길(延吉)-도문(圖門)-훈춘(琿春) 구간 고속철 건설 방안을 논의, 2013년 이 고속철 전 구간을 개통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지린성과 철도부는 이 고속철 가운데 일부인 돈화-연길 구간은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건립 60주년을 맞는 내년 9월에 맞춰 완공키로 했음. 지린에서 교하(蛟河)와 돈화, 안도(安圖), 연길, 도문을 거쳐 훈춘에 이르는 총 길이 378km의 이 고속철은 377억 위안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지린성 사상 최대 규모의 철도사업으로, 올해 착공됨.
- 중국은 애초 고속철을 2015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라선특구 북·중 공동개발과 라진항을 통한 동해 출로 확보에 따라 훈춘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완공 시기를 2년 앞당겼음.
- 지난해 완공된 창춘-지린-훈춘 고속도로에 이어 시속 250km로 운행할 이 고속철까지 개통하면 북한, 러시아와 접해 있고,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으로 통하는 길목인 훈춘이 명실상부한 두만강 유역의 북·중·러 3국 물류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中 올 상반기 두만강유역 대북 교역 급증(7/26)

- 두만강 유역에서의 북한과 중국 간 올해 상반기 교역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회령과 맞닿은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용정(龍井)시 삼합(三合)통상구의 올해 상반기 대북 교역량이 5만t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증가했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6일 보도했음.
- 이 기간 삼합통상구를 통해 북한을 오간 인원도 1만 명을 넘어서 작년 동기보다 57% 늘었으며 양국 통행 차량 역시 5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6% 증가했음. 용정시는 대북 교역 활성화를 위해 통관 수속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북한도 수출·입 화물의 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 물량과 쌀과 밀가루 등 중국산 곡물의 수입 쿼터를 늘리는 등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적극적이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 이에 앞서 연변일보는 지난 15일 두만강 유역의 최대 대북 교역 창구인 훈춘(琿春) 권하(圈河)통상구의 올해 상반기 대북 교역량 역시 9만2천25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4% 급증했다고 보도했음. 권하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인원도 10만5천208명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117.1% 증가했음.
-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대북 교역을 전면 중단시킨 '5.24 조치' 이후 대외 무역에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6일 발표한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북한의 지난해 대외 무역 규모가 60억8천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으며 이는 북·중 간 무역이 전년보다 29.3%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음.
-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북·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52.6%에서 지난해 56.9%로 상승했으며 이런 대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더 심화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음.

● 中, 北 석영 채굴권 확보..연 5만t규모(7/26)

- 중국이 북한의 석영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고 길림신문이 26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장백(長白)현에 있는 장백경제개발구 변경무역 수출입총회사가 북한의 조선신진회사와 공동으로 량강도 김정숙군에 있는 석영 광산을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이 광산에서 채굴된 석영을 처음으로 중국에 들여왔음.
- 이 회사는 북한 측과 오랜 협의 끝에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으며 연간 4만~5만t의 석영을 채굴해 중국에 들여올 계획임. 장백현은 북한에서 채굴된 석영을 반입하기 위해 최근 북한 접경인 심삼도구에 임시 통상구를 개설했음.
- 압록강을 경계로 장백현과 접해 있는 김정숙군은 원래 신파군이었으나 1981년 김일성 주석의 처인 김정숙의 이름을 따 개칭됐으며 석영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영은 유리나 도자기, 금속 주조용 주



형의 재료로 사용되는 광물임.

- 국제사회 제재와 남북 교역 중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중국 자본을 유치, 지하자원 개발에 나서는 한편 철광석과 무연탄의 중국 수출에도 적극적임.

● "상반기 北中교역 사상최대...작년의 2배"(7/29)

- 올해 상반기 북중 간 교역액이 25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전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통계자료를 종합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중 간 교역액은 25억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억8천800만 달러의 배에 달했음.
- 특히 북한의 대중수출 규모는 작년 동기(3억5천만 달러)보다 202%증가한 10억5천6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 수입액은 14억5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54% 증가하는 데 그쳐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5억9천만 달러에서 3억9천200만 달러가량으로 크게 줄었음.
-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 1~4위는 석탄, 철광석, 비합금선철, 아연으로 특히 1위인 석탄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약 4억8천300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20t이상 화물차, 석유와 역청류, 직물류, 황산암모늄 순이었음.
- VOA는 "북한은 1천400만 달러어치의 1천500~3천cc급 자동차를 수입했다"며 "2천300만 달러어치의 휴대전화 단말기, 1천만달러대의 휴대전화 관련 장비가 눈에 띈다"고 전했다.

● 北-中, 라선 공동개발 계획 기본 틀 합의(7/29)

- 북한 라선시와 중국 지린(吉林)성이 29일 라선 경제무역구 공동개발 계획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길림신문이 보도했음. 신문은 양측이 이날 창춘(長春)시 난후(南湖)호텔에서 '중조(中朝) 라선경제무역구(2011-2020년) 계획 기본 협의를 맺었다고 전했다.
- 북측에서는 라선시 인민위원회 황철남 부위원장, 중국에서는 천웨이건(陳偉根) 지린성 부성장이 대표로 나서 협의에 서명했음. 신문은 그러나 이날 맺은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다만, 협의 명칭에 '2011-2020년'이 명시된 점으로 미뤄 북·중이 라선 공동개발 기간을 10년으로 잡았을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추론하고 있음. 양측은 이날 체결된 협의를 토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라선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 계획 협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이날 협의 체결에 이어 라선특구 개발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과 라선시 간 합작 협의회와 각서도 체결됐음. 협의 체결에 앞서 쑨정차이(孫政才) 서기와 왕루린(王儒林) 성장 등 지린성 간부들이 림정만 라선시 책임비서 일행을 만나 라선 특구 공동개발 방안을 논의했음.
- 쑨 서기는 이 자리에서 "라선과 황금평·위화도 공동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린성은 이미 라선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마



련했으며 교통망과 자원 개발, 농업 분야에서 합작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소개했음. 이어 "양국 간 협정 내용을 적극 추진하고 합작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라선 공동개발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림 서기는 "지린성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라선 경제무역구 공동개발 계획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라선 대표단과 지린성은 이에 앞서 지난 26-28일 창춘에서 '중조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 관리사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날 체결한 협의문안 등을 논의했음.

라. 일·북 관계

● "北·日, 지난주 中 창춘서 접촉"〈교도〉(7/25)

- 나카이 히로시(中井浩) 일본 전 납치문제담당상이 지난주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났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복수의 북·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지만, 나카이 전 담당상은 이를 부인했음.
- 교도통신은 나카이 전 담당상이 지난 21, 22일 중국 창춘(長春) 시내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송일호(宋日昊)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와 회담했다며, 나카이 전 담당상의 중국행에는 일본 내각부 납치문제 대책본부 직원도 동석했다고 전했다.
- 이 통신은 북일 양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의견 조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1년7개월 만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데 맞춰 북·일 간의 물밑 절충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음.
- 하지만 나카이 전 담당상은 이날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 관계를 부정했고,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도 "(나카이씨의) 개인적인 여행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 사실관계 자체를 모르겠다"고 말했음.
- 에다노 관방장관은 납치문제대책본부 직원이 동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책본부 사무국으로부터 '이 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노 유타카(仲野豊) 외무성 부대신은 "외무성은 사전에 몰랐던 얘기이고, 현시점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일본 총리가 방북했을 때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했고, 생존자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지만, 일본은 자체적으로 납치 피해자로 인정한 17명의 소재 파악과 귀환을 요구하고 있음.

● "日, 6자회담 재개전 北과 대화 실현"(7/26)

- 일본 정부가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 북한과의 대화를 실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의 협의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일본-북한



대화만 없는 상태에서 6자회담에 나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서두르기로 했음. 하지만 북한이 일본의 대화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함.

- 일본과 북한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8년 8월 실무자협약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재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그해 9월 후쿠다 총리가 퇴진하고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서 북한이 재조사에 나서지 않아 양측의 대화가 중단됐음.
- 마쓰모토 다케이키(松本剛明) 외무상은 지난 23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남북 대화가 진전되고 미·북, 일·북 대화를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는 흐름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교도통신은 25일 나카이 히로시(中井浩) 전 납치문제담당상이 지난 21일과 22일 중국 장춘(長春) 시내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송일호(宋日昊)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와 회담했다며, 나카이 전 담당상의 중국행에는 일본 내각부 납치문제대책본부 직원도 동석했다고 전했다.
- 이 통신은 북·일 양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의견 조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1년7개월 만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데 맞춰 북·일 간의 물밑 절충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음.
-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직접 협상에 나설 의향이라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간 총리가 물밑에서 북한 방문을 타진하는 것은 10%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 자리를 연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음.
- 신문은 나카이 전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에 납치자 문제 해결의 진전을 요구한 데 대해 북측은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음. 하지만 이에 대해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리와 외무상, 납치문제담당상에게 모두 확인했으나 누구도 방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음.

● "日, 北과 8월 납치·핵문제 협의 검토"(7/27)

- 일본이 내달 북한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핵 문제 등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납치 문제 재조사와 대화 재개를 북한 측에 요구하라는 납치 피해자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8월중 북한과의 협의를 검토하도록 관계 각료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남북 대화가 진전된 후 미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의 협의를 거쳐 6자 회담을 재개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음.
- 일본 정부는 간 총리 등 정부 고위 관료의 방북설은 부정하고 있지만 대화 추진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간 총리가 다음 달 퇴



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권의 구심력과 리더십이 약화된 상태여서 북한이 일본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함.

● <日 고위인사 대북 접촉 '이중외교' 논란>(7/28)

-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浩) 전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중국에서 북한의 고위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정치권에서 '이중외교' 논란이 일고 있음.
- 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조회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현역 중의원 의원인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의 북한 고위인사 접촉설과 관련 "북한과의 대화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대해 정부와 여당간 의사소통이 없다면 이원외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음.
-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친서를 지니지 않고 북한 관계자를 만났다면 문제라는 시각임. 설사 총리의 친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 추진이 퇴진 의사를 표명한 간 총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임.
- 야권에서는 총리의 지시하에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이 공식 외교채널을 제쳐두고 움직였다면 북한과의 대화 추진으로 실적을 올리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음.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은 국회에 중국 방문의 목적이 '정치경제 정세의 시찰'이라고 신고했으나 자민당과 공명당은 그가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인 만큼 사실 관계를 규명하겠다고 입장임.
- 공식 외교 채널인 외무성 일각에서는 시한부인 간 내각에서의 대북 외교 추진은 북한의 페이스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정권 말기에 북한 방문을 시도했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정국에서 해제했으나 결국 북한에 이용만 당했다고 지적했음.
-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북한과 접촉할 것이 아니라 뚜렷한 전략을 갖고 신중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음. 납치자 문제 해결 등 '한 건'을 노린 북한과의 대화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음.
- 하지만 정부와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은 대북 접촉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 중국 창춘(長春)에서 태어난 나카이씨는 "창춘을 방문하긴 했지만 고향 방문이었을 뿐 북한 인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음.
- 하지만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이 납치문제대책본부 직원을 대동하고 지난 21~23일 창춘을 방문해 송일호(宋日昊)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와 만났다고 접촉을 기정사실화했음.

● 北 "日의원 울릉도 방문강행 절대 용납 안 돼"(7/30)

- 북한은 30일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등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겠다고 울릉도 방문 강행 입장을 밝



헌 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최근 일본 반동들이 남조선 여객기의 독도상공 시험비행을 걸고들며 일본 공무원들의 남조선여객기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까지 강행하려 해 남조선 인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 보도문은 이어 "일본 반동들의 이런 망동은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를 차지해보려는 영토 강탈 야망을 다시금 전면에서 드러낸 것으로 이는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될 민족의 중대문제"라고 강조했다.
- 조평통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 반동들이 강도적인 독도 영유권을 내세워 더욱 더 날뛰고 있는 것은 남조선의 현 보수 집권세력의 대일 굴욕외교가 초래한 후과"라며 "남조선 보수 패당은 일본 반동들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저들의 영토로 표기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할 때마다 그에 대해 한 번도 문제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조평통은 "역적패당이 일본 반동들의 영토강탈 책동에 어정쩡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같등을 피하고 반공화국 공조에 더욱 매달려 보려는 흉심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라고 남측을 비난했다.

마. 기 타

● "北, 유엔에 수해지원 공식 요청"(7/26)

- 북한당국이 평양주재 유엔기구에 수해 지원을 공식 요청해 유엔이 합동 조사단을 급파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했다.
- 유엔아동기금(UNICEF) 아시아 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은 이들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당국이 25일 유엔 기구들에 북한에 미리 비치해 둔 응급 구호물품을 방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유엔 기구와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 등 비정부 기구들이 합동대책단을 구성했다. 유엔 합동대책단은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최근 장마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진 황해남도 해주시와 청단군, 황해북도 서흥군에 긴급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임.
- 북한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 상황을 집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 물품을 동원해 수재민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적십자, 황해도 수해지원 시작"(7/27)

- 북한이 국제기구에 수해 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황해도 지역에 구호물품을 분배하기 시작했다고 27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 프랜시스 마커스 IFRC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자료를 통해 "조선적십자회가 개성시를 포함한 황해북도 수재민들에게 주방용품, 식수통, 이불, 방수비닐막 등이 포함된 응급 구호세트 600개를 분배했다"며 "앞으



- 로 황해남도에서 2천460세트를 더 분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IFRC는 수해에 대비해 북한 수재민에게 제공할 응급구호세트 2만7천개를 비치해뒀으며 수질정화제와 수건, 비누, 화장지 등이 든 위생물품 세트도 전달될 예정임.
- 마커스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내린 폭우로 황해북도에서 900채, 황해남도에서 2천460채의 가옥이 파손됐음.
- 북한의 공식 지원 요청을 받은 유엔은 지난 25일 황해남도 해주시와 청단군, 황해북도 서흥군으로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 등의 관계자로 꾸린 합동대책단을 급파했음.
- WFP 동아시아 사무소의 마커스 프라이어 대변인은 "합동대책단이 북한에 지원할 식량의 수요를 파악하고 어떤 식량을 공급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조사기간을 3일 정도로 예상했음.

● 국제NGO '모니터링 방북' 줄 잇는다(7/27)

- 유엔기구와 유럽연합(EU)이 엄격한 분배 확인을 조건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국제 민간단체(NGO)들이 지원물자 분배 확인을 목적으로 잇따라 방북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음.
- 방송에 따르면 독일의 구호단체인 캡 아나무르(Cap Anamur)의 번트고켄 대표는 평안남도 안주 등에 지원한 쌀과 콩의 분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주말 방북해 내달 3일에 돌아올 예정임.
- 이 단체는 지난 5월 안주와 해주 등에 수백t의 쌀을 전달했고 최근에도 쌀 1천t을 지원했으며 얼마 전 해주의 한 타아소에서 얼굴이 앙상한 상태의 잠든 아이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끈 바 있음.
- 또 북한 내 29개 결핵병원과 요양원에 의약품과 식량 등을 지원하는 미국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8월 초에 닭고기 통조림과 영양보조제, 담요 등을 실어 북한으로 보낼 예정임. 이 단체는 9월께 방북해 이전에 보낸 의약품과 식량을 포함한 지원물품의 분배상황을 확인함.
- 방송은 또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해 콩우유를 지원하는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도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북한을 방문, 19일 120t의 콩이 북한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평안남도과 강원도의 고아원, 유치원, 진료소 등에서 어린이 8만 여명에게 매일 콩우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700~750t가량의 콩을 보낼 계획임.
- EU집행위원회는 분배감시 강화를 조건으로 지난 4일 북한내 취약계층 약 65만 명을 대상으로 한 1천만유로 상당의 긴급구호를 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국제 민간단체들이 활발하게 대북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을 포함한 민간단체 5곳이 긴급식량구호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 <국제사회 대북지원 재개 가속>(7/27)

-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료 지원 재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유엔과 유럽연합(EU), 스웨덴 등이 북한에 대한 긴급 구호 식량과 의료 물품 지원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2005년 폐쇄됐던 평양 사무소의 재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발레리 아모스 OCHA 국장은 오는 10월께 북한을 방문해 OCHA 평양 사무소의 상주인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OCHA는 인도주의 대북 지원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평양사무소가 재개설되면 대북 지원이 지속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큼.
- 제네바의 한 외교 관계자는 27일 "OCHA의 평양사무소 개설은 지난해부터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었고, 북한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대북 지원을 중단해왔던 국제기구들이 대북 지원 재개를 통해 존재감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의 경우 적어도 서류상으로 만큼은 지원의 효과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국제기구들이 선호하는 지원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스웨덴 정부는 이달 중순께 영국 '세이브 더 칠드런', 아일랜드의 '킨선 월드와이드', 프랑스의 '프리미에르 위르장스' 등 유럽 구호단체들을 통해 294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의료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밖에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 '캡 아나무르(Cap Anamur)'는 지난 5월 평안남도 안주시와 황해남도 해주시에 200t의 쌀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200t이 넘는 쌀과 콩을 북한에 전달했다.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은 1년간 약 2억 달러 규모에 달함.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핵 실험 이후 경색됐던 대북 지원 분위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과 함께 북한 정부가 지원 조건으로 제시된 엄격한 지원물자 분배 확인 절차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기상위성·예보' 공조 강화 합의(7/28)

- 한·미 양국 기상당국은 27일 기상위성 품질개선과 차세대 관측기술 개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 기상협력회의'에서 미 해양대기청(NOAA)과 이 같은 내용의 공조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WMO) 공동 이사국으로



- 서 향후 활동 방향과 함께 기상업무 기술협력 촉진, 개발도상국 기상기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음.
- 특히 우리 기상청이 세계 7번째 기상위성 운영기관으로 성장한 것을 평가하면서 향후 2년간 기상위성 품질개선 기술 개발과 관련 자료 교환 등에 적극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음.
 - 이와 함께 통합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세대 관측기술 개발, 동네예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초단기 예보기술 개발, 레이더 관측망 개선, WMO 장기에보선도센터 공동운영, 탄소추적시스템 공동개발 등도 추진기로 했음.
 - 기상청 관계자는 "양국은 지난 2000년 기상협력에 관한 약정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상서비스 전달과 전지구기후서비스체계(GFCS) 분야에서 WMO 공동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세계기상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음.

● 마틴 뎀프시 美 육군참모총장 방한(7/30)

- 차기 미국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마틴 뎀프시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했음.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뎀프시 총장은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 미군 기지를 통해 입국한 뒤 29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한민구 합참의장과 북한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음.
- 뎀프시 총장은 한 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둘러본 뒤 29일 오후 출국했음. 군 관계자는 "뎀프시 총장은 육군참모총장 자격으로 방한한 것"이라면서 "통상 미국 육군참모총장들은 임기가 끝날 무렵 한국을 한 번씩 방문한다"고 말했음.
- 뎀프시 총장은 올해 4월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지 1개월 여 만에 차기 합참의장에 지명됐으며, 상원 인준을 거쳐 10월께 취임할 예정임.

나. 한·중 관계

● 27일 제1차 한·중 국방전략대화 개최(7/25)

- 한국과 중국은 제1차 국방전략대화를 27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음. 이용걸 국방차관과 마샤오펜(馬曉天) 중국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합의한 국방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정세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회담 후 마샤오펜 부총참모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예방하고 공군부대를 방문함.
-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난 2008년 양국 정상이 선언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걸맞게 국방분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도 국방차관-부총참모장 간의 전략대화를 가



동하고 있음. 중국군 부총참모장은 중국군의 군사외교와 대외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다큐 제작(7/26)**

-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하는 특집 다큐멘터리와 종합 토크 프로그램이 양국 공동으로 제작돼 내년에 방송됨.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지난 25일 중국 CCTV 본사에서 KBS, CCTV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영상물 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이 협약에 따라 콘진원, KBS, CCTV 등 3개 기관은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는 내년 초에 신년기획 다큐멘터리 2편과 종합 토크 프로그램을, 한-중 수교일이 포함된 8월에는 수교 2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4편과 종합 토크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해 방송함.
- 신년기획 다큐멘터리 2편의 주제는 '중국 속의 한국'과 '한국 속의 중국'으로 정했으며, 촬영은 CCTV와 KBS가 각각 맡기로 했음. 종합 토크 프로그램은 양국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이원 생방송 방식으로 녹화해 방송할 계획임.
- 내년 8월 방송될 수교 20주년 기념 프로그램은 '문화'와 '경제'를 주제로 제작하되 방송 방식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음.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콘진원이 진행하는 '국제방송문화 교류 지원 사업'에 따라 추진됐음.

● **中, 이어도 인양작업 한국선박에 작업중단 요구(7/27)**

- 중국이 제주도 남쪽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 중이던 한국 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어도 남서쪽 0.8km 지점 해상에서는 한국 예인선과 바지선이 지난 4월부터 암초에 걸려 침몰한 5만905t급 석탄 벌크선에 대한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음.
- 중국은 지난달과 이달 초 침몰 해역에 관공선을 보내 한국 선박에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인양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으며, 제주 서귀포해경은 경비함을 급파해 중국 관공선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해경 경비함은 이후 인양작업 현장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외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다"면서 공식대응을 삼가고 있음.
-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이어도와 관련해 중국 측과 특별한 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양국 실무선에서 분쟁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해 인양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한중, 10월 군수협력회의 개최 합의(7/27)**

- 한국과 중국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군수협력회의를 개최해 재난구호 상



- 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기로 합의했음. 양국은 27일 오후 이용걸 국방부 차관과 마샤오텐(馬曉天) 중국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1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음.
- 회의에서는 내년 군사교육 교류의 재개와 함께 앞으로 이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9월 중 서울에서 실무급협의를 개최기로 했음. 특히 양측은 국방 당국간 협력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양자 간 상호신뢰와 이해 증진을 위해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국방교류협력 스터디그룹' 발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국방전략대화 협의체가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와 상호 교류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가도록 노력하기 했다"고 강조했다.
 -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이 각각 주변국과의 교류협력 현황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이런 노력은 두 나라가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양국 국방학술회의 확대 개최 등 국방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마 부총참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이웃나라로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국가들이다. 양국관계 발전에 따라 국방 분야도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신뢰를 증진하는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용걸 차관은 "양국 국방전략대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특히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합의한 내용을 바로 실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매년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국방전략대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전략대회에는 한국 측에서 국방부의 최흥기 국제정책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 염주성 동북아정책과장 등 8명이, 중국 측에서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와 차이용 주한 국방무관 등 8명이 각각 참석했음.
 - 한편 마샤오텐 부총참모장은 28일 공군 19전투비행단 방문에 이어 김관진 국방장관을 예방하고 민찬을 함께 할 예정임. 29일에는 해군기지 건설로 군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제주도를 방문하고 다음 날에는 부산 시내를 탐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군인 마 부총참모장은 총참모부 산하 국방학술기관인 국제전략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중국군의 대외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입국심사대 통과 불허" 사전통보키로(7/29)

- 정부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을 위해 입국을 시



도할 경우 김포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음. 정부 당국자는 29일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정부로서는 정해진 입장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로서는 막판까지 이들 의원이 울릉도 방문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은 당의 파견 형식이 아닌 개인적 방문 형태로 소속 의원 4명의 울릉도 방문을 용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음.
-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 주말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공식 요청했으며 지난 26일 외교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온 것으로 확인됐음. 일본 외무성의 다카하시 지아키(高橋千秋) 부대신(차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울릉도를 방문하는 자민당 의원의 안전확보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예상치 않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됨.

● 정부, 무토 주한 일본대사 초치(7/29)

-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9일 오후 3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 통보했음.
- 김 차관보는 이들 의원들이 다음 달 1일 울릉도 방문을 위해 입국할 경우 신변안전 확보가 어렵고 양국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해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통보했음.
- 이에 대해 무토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 정부에 즉시 정확하게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음. 무토 대사는 이날 김 차관보와 38분간 면담을 가진 뒤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쿄에서 발표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음.
-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의원 등 자민당 의원 4명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 한국으로 떠나 2일 울릉도를 방문한 뒤 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음. 한편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해 입국불허 결정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문의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입국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들 의원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입국을 불허하고 정중하게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음. 이 당국자는 자민당 지도부가 이들 의원의 방한을 용인하기로 했다는 산케이 신문 보도에 대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자민당 측은 '그런 얘기한 적 없으며 근거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들 의원의 방한에 대해



국회와 당 모두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日 중학교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잇따라>(7/29)

- 일본 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로 보수우익 단체가 만든 왜곡 교과서를 선택하는 지역이 늘어나 일본 내 시민단체가 긴장하고 있음.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현 후지사와(藤澤)시 교육위원회는 28일 시립 중학교 19개교에서 사용할 역사와 공민 과목 교과서로 이쿠호샤(育鵬社) 책을 채택했다.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함.
- 또 도쿄도 교육위원회도 28일 중·고교 교육을 함께하는 일관교(一貫校) 중학교정의 역사·공민 교과서로 이쿠호샤판을 골랐음. 이쿠호샤 교과서는 '일본교육재생기구'라는 보수우익 단체가 만든 책임. 일본의 한국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고,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고 묘사하는 등 이른바 '자학사관 극복'을 내걸기는 일본 내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자유사(自由社)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상 오류가 적다는 점을 강조해 인기를 끌고 있음.
- 이달 중순에 시작된 지역별 교과서 선택과정에서 이쿠호샤 교과서를 고르는 도치기현 오타와라(大田原)시,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東大阪)시에 이어 세번째와 네번째에 해당함. 이중 오타와라시나 도쿄도는 이전에도 2006년부터 이쿠호샤의 전신인 후소사(扶桑社) 등의 교과서를 사용했지만, 히가시오사카시와 후지사와는 다른 출판사의 책을 썼던 지역임.
- 새역모나 일본교육재생기구가 만든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은 2001년 0.039%, 2005년 0.4%, 2009년 1.7%(11월 현재)에 그쳤지만 새역모는 3월30일 기자회견에서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을 각각 5~1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 운동'을 벌이는 일본 시민단체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관계자는 "이쿠호샤 교과서 채택이 예상보다 늘어나는 걸 걱정하고 있다"며 "자민당이 조직적으로 왜곡교과서 채택을 후원하고 있고, 일본 언론이 침묵하는 게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日자민당 의원 3명, 울릉도 방문 강행키로(7/30)

-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고자 울릉도에 가겠다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에도 불구하고 방한하겠다고 선언했음. 울릉도 방문 의원단 단장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은 30일 낮 12시 도쿄의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일정상 갈 수 없게 된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예정대로 8월1일부터 4일까지 방한할 것"이라며 "한국 측이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사전 통보 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는 만큼 한국에 가보겠다"고 밝혔다.
- 방한한다는 3명은 신도 의원과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중의원 의원,



-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임. 신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리들의 입국을 거부하면 이는 한일간 외교 문제가 될 것이고,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또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한국에서 소동을 벌이려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방한 시점을 8월초로 잡은 이유에 대해 "한국 측이 8월5일 다케시마에서 주민 숙소 완성 기념식을 열고, 12일에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날짜를 8월초로 잡았다"고 밝혀 정치 논란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 자민당은 공식적으로는 국회 회기 중 의원들의 외유에 필요한 국회 허가 등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개인 방문'에 동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도 의원은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간사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책조사회장이 ('개인 방문으로 처리하자'는) 얘기를 나눴고, 나는 정책조사회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사실 당 파견이나, 의원 개인 방문이나는 차이는 당이 경비를 지원하느냐는 점뿐이고 요즘 자민당은 사정이 어려워 (파견 시에도) 경비를 모두 주지 못 한다"고 말했다.

라. 미·중 관계

● 클린턴·다이빙귀 中선전서 회담 예정(7/25)

- 미국과 중국의 실무 외교사령탑이 25일 오후 선전(深천(土+川))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인도네시아 발리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후 24일 홍콩으로 향했던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선전으로 이동해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담할 예정이다.
- 이들의 회동은 22일 '발리 남북비핵화 회담' 성사 후 오는 주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로 '뉴욕 북미대화'가 예정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됨. 특히 클린턴 장관이 이례적으로 북미대화 개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북한 역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상황 진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를 앞두고 열리는 미·중대화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미국은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방지하면 자칫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등의 악조건 속에서 대화를 선택했으나, 적어도 북한이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EP)을 지속할 경우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시선이 쏠림.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은 '발리 남북비핵화 회담'이라는 1단계를 거쳐, '뉴욕 북미대화'를 통해 2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기회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외교가는 따라서 클린턴·다이빙귀 회담에서 중국은 무엇보다 북한이



- 대화의 장(場)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이 이런 북한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음.
- 이에 미국은 김계관 제1부상의 방미는 지난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후 논의됐던 사안으로 새로운 카드는 아니라는 입장이며, 따라서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만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특히 김계관 제1부상이 어떤 카드를 갖고 방미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중국에 북한을 설득해 상황 진전을 이룰 실질적인 카드를 준비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런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장관과 다이빙귀 국무위원은 회담을 통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는 두루뭇술한 문구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회담에서는 이밖에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방중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됨.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은 지난 1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통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연내 방미와 연계돼 있음.
 - 중국은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관측됨.
 -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연합) 간의 행동규범 지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됨.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크게 다루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美-中, 아태지역 안정 강화 합의" <중외교부>(7/25)

- 중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 강화에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5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 양측이 "아-태 지역에서 어렵게 얻어진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보존하고 진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 이어 외교부는 다이빙귀 국무위원과 클린턴 장관이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날 회담을 '비공식 회담'으로 지칭했음.

● 中왕이 "美, 대만에 무기 팔지 말라"(7/29)

- 중국의 왕이(王毅) 대만사무관공실 주임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정책의 실무 사령탑인 왕이 주임은 현지시간으로 28일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 서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과의 좌담회에서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고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29일 보도했음.
- 왕 주임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는 중·미 관계에 해를 줄 뿐더러 중국·대만 간 양안(兩岸)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중·미) 이해당사자들이 자리를 맞대고 앉아 대만의 무기판매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할 지를 두고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음.
 - 그는 아울러 "이번 방미는 양안관계와 현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국의 우려를 미국에 설명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미국이 이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 달라"고 주문했음.
 - 그러면서 "최근 일부 언론매체들이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근래 완화된 양안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중국군의 군사력 배치는 방어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대만 동포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역설했음.
 - 왕 주임은 앞서 27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에 언급,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거부감을 표시했음. 그러자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류더신(劉德勳) 부주임위원은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여서 대만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중국의 내정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음.
 -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테일리는 왕이 주임의 이번 방미는 정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미 하원에서 대만에 대한 F16 전투기와 디젤 잠수함 판매에 대한 승인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음.